

전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5% 달성

1072억원 이상 시중 유통...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소비쿠폰 부정유통 발견시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 조치

전북특별자치도민 100명 중 95명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오후 6시) 기준 전북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5%를 기록했다. 지급 대상 171만6,841명 중 162만9,552명이 받았으며, 총지급액은 3,577억원 중 3,378억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발급된 소비쿠폰 중 1,072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해의 체류 후 귀국자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주민, 취약계층 자격 변동자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5,972건 중 5,724건(95.8%)이 처리됐다.

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6일까지 누적 18,59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용처 문의(33.6%)와 신청 방법 관련 문의(25.1%)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내 14개 시군과 24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200명이 투입돼, 거동 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2만9,000여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9월 1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벤트를 개최해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총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이 민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와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통시장,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고정요금제 운영과 착한 가격업소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소비쿠폰 재판매나 부정 현금화 등을 막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280-4950~4955)도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 환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장 가맹점을 운영할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넘어서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호남권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호남권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 위문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김관영 지사, 존경·감사의 마음 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호남권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를 위문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문에는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신재철 전주보훈요양원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함께 자리해 이 지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1926년생인 이석규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이 같은 공로로 2010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국

내 생존 애국지사 4명 중 한 분으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전복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 이차전지 소재 허브로 도약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291억 확보 등 11개 유관기관·기업 협력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은 K-배터리 혁

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솔케미칼, 성일하이텍 등 도내 1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이들은 지난 5개월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실행 전략을 수립해왔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백 영역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소재부터 부품, 셀 제

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R&D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으로는 △LFP(리튬인산철) 리사이클링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망 구축, △실리콘 음극재의 성능 고도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 △전력기술 확산과 글로벌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 등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 중심의 지역 주도형 R&D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기술혁신허브'는 기존 이차전지 인프라와 연계해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체계 확립, 임무지향형 R&D 수행, 기술사업화 등도 수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LFP 재활용을 통한 리튬 순도 99% 이상 확보 △실리콘 함량 20% 이상 음극재 개발 △사업화 연계 1,500억원 이상 매출 창출 및 140명 이상 고용 유발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지역기술혁신허브 선정은 전북이 국가전략기술 확산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담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4곳 선정... 국비 총 132억원 확보

투자선도지구에 전주시·남원시 선정 - 국비 100억원+α

지역수요맞춤지원에 장수군·정읍시 선정 - 국비 32억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투자선도지구 2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 2개소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관광 활성화와 생활거점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 활

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전주MICE사업'은 2028년까지 총 10,547억 원을 투입해 전주종합경기기장 부지 12만㎡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백화점, 호텔, 미술관 건립 등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1,958억 원을 들여 역세권 및 배후부지 40만㎡에 교통·정주·문화시

설과 드론, 스마트농업,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 시설을 집적화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는 '장수 방화동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사업비 35억)'과 '정읍 새암달빛광장 조성사업(사업비 11억)'이 선정됐다.

장수군은 오는 2027년까지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족욕 체험장, 산책로 등 설치해 치유형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읍시는 원도심 구 우체국 부지에 시민 휴식 공간과 문화 행사를 위한 시민광장을 만든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자치도는 투자선도지구 100억원, 지역수요맞춤 32억원 등 총 13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기재부 협의 결과에 따라 50~100억원의 추가 국비 지원도 전망된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4곳의 지역개발사업 선정으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 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부안,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

청년특화주택 140호 공급 등... 청년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공모 사업에 고창군과 부안군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총 179억원(고창 32.3억원, 부안 14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40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환경을 구축한다.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청년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40호(1,835㎡)와 100호(5,294㎡)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공유오피스, 휴게라운지, 도서관, 헬스장, 세탁실 등 맞춤형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혼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대학생이다.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 전주·부안 170호, 2024년 고창 200호에 이어 3년 연속 성과를 거둔 것이다.

올해 전북은 전국 청년특화주택 총 3개 사업 중 2개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 정착 지원과 주거 안정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공모에 신청한 2개 지역 모두 선정된 것은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결과"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를 통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공고 제2025-1444호

분묘개장공고(2차)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2공구) 추진을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8조, 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불임참고(분묘조서)
2. 개장사유: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2공구)
3. 공고기간: 최고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 안치
가. 유연묘지: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묘지: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고자)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6.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5년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분묘개장 공고 이전 합의개장된 분묘가 분묘조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감읍합니다.
9. 신고처: 고창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63-560-2552

2025년 8월 8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